

2018

2018

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

규제완화 정책  
동향보고

2018.02. part2 제 92 호

# Contents

## I . 정부 추진동향

1. 산업위 법안소위 ,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의결 3
2. 앞뒤 안맞는 규제개혁 정책...대체법안을 ' 동시추진 ' 한다는 정부 4
3.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 ...『혁신도시 시즌 2』 본격 시동 5
4. 與 , 규제프리존법 반영 ' 규제혁신 5 법 ' 추진..." 野 설득 가능 " 6

## II . 수도권 추진동향

1. 수도권 경쟁력 갉아먹는 거미줄 규제... 이번엔 완화될까 8
2. 2 차 공공기관 이전 9

## III . 비수도권 ( 지역 ) 추진동향

1. 공공기관 옮겨지만 기업은 수도권에 .. 균형발전 ' 절반의 성공 ' 10

## 1. 산업위 법안소위,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의결

## 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2.20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연합뉴스

## 02

주요내용

■ **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 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**

-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가 국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
- 이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위원회 의견의 효력을 강화하고, 또 시·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 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
- 아울러 당연직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 대표자를 추가하고, 시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
-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 파행 13일 만에 전격적으로 정상화에 합의했지만, 이날 법안소위에 한국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음
-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
  - 의사일정은 미리 합의돼야 하는데 국회 정상화가 오늘 낮 12시 가까이 돼서 결정 난 상황이고 연휴에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해온 상태라 물리적으로 오늘 법안소위는 불가능한 상황
  -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법안소위에 참여할 예정

## 2. 앞뒤 안맞는 규제개혁 정책...대체법안을 ' 동시추진 ' 한다는 정부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2.25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전자신문 EtnEws

## 02

## 주요내용

## ■ 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제 개혁 정책을 추진, 논란을 빚고 있음

- 중소기업부가 의원 입법 형태로 ' 지역특구법 개정안 ' 을 준비
-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규제프리존법의 대체 법안이나 기획재정부는 규제프리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
- 이런 부처 간 엇박자는 국회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
  - 정부가 규제프리존 정책을 공식 포기하면 야당 반발로 새로 마련할 대체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부득이 모순된 정책 ' 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
-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때 자유한국당 ( 당시 새누리당 ) 중심으로 마련한 ' 규제프리존법 ' 과 규제프리존법의 대체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' 지역특구법 개정안 ' 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
  -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 대 법안 가운데 하나
-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김용진 기재부 2 차관
  - 최근 국회에서 지역특구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혁신 법안을 준비하고 있음
  - 국회가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에 의한 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
-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규제프리존법의 대안 성격이냐는 질문 김용진 기재부 2 차관
  - 대안이 아니라 규제프리존법 취지를 담은 새로운 법이라고 설명
  - 두 법안을 두고는 충돌되지 않는다며 동시 추진 입장을 명확히 했음
- 실제 기재부는 지난 정부 때 규제프리존법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한 팀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음
- 반면에 지역특구법을 운용하고 있는 중기부는 규제프리존법 대안으로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 ( 발의는 국회의원 발의 예정 )
-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된 '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 ' 초안 자료
  - 국민건강, 안전, 환경보호, 규제훼손, 지역 ( 재벌 ) 숙원사업 특혜 등 규제프리존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체 법안을 마련 · 추진이라는 개정 배경이 명시
  - 규제프리존법을 대신할 ' 대체 법안 ' 임을 명확히 한 것
  - 중기벤처부 관계자 :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 규제프리존법은 추진 안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함
- 지역특구법 개정안 초안 자료만 봐도 규제프리존법과의 동시 추진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
  - 규제프리존법의 핵심인 의료 등 분야에서의 산업 특례가 지역특구법 개정안에서는 아예 제외
  - 국회가 2 년가량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도 이 부분이 원인
-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특구법 개정안 초안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면서도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대체 법안 ' 지 규제프리존법과 함께 추진 가능한 ' 보완 · 추가 법안 ' 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함
- 기재부 관계자
  -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논의가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기재부 입장도 정리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

### 3.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출범 ... 『혁신도시 시즌 2』 본격 시동

## 01

개요

보도형식	보도자료	보도일자	2018.02.27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국토교통부

## 02

주요내용

#### ■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

- 금년 10 월,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담은 종합발전계획 발표
- 국토교통부 ( 장관 김현미 ) 는 『혁신도시 시즌 2』 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3 월 1 일부터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힘
- 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, 혁신도시 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 \* 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
  - ( 현행 ) 『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 → ( 개정 ) 『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』
-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‘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’ 은 추진단 명칭 변경과 함께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『혁신도시 시즌 2』 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이 개편
  - 국토부 1 차 관을 단장, 부 단장 ( 고공 단 ‘나’ 급 ) 직 할로 정책 총괄 과, 계획 과, 산업 과, 지원국장 ( 고공 단 ‘나’ 급 ) 아래 지원정책과, 상생발전과, 대외협력과 등 6 개과, 총 34 명 규모로 구성

현행	개편	현행	개편
기획총괄과	혁신도시정책총괄과	지원정책과	혁신도시지원정책과
중전부동산기획과 / 혁신도시재정과	혁신도시계획과		혁신도시상생발전과 ( 신설 )
투자유치지원과	혁신도시산업과	대외협력과	혁신도시대외협력과

- 혁신도시정책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『혁신도시 시즌 2』 사업총괄 및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개선사업을 담당
- 혁신도시산업과는 산 · 학 · 연 클러스터 활성화를, 혁신도시상생발전과는 지역생활권 내 상생발전 및 협력 등 『혁신도시 시즌 2』 의 주요 신규업무를 수행

구분	시즌 1 ('05.~'17.)	시즌 2 ('18.~'30.)
추진주체	중앙정부 (Top Down 방식 )	지방정부 (Bottom Up 방식 )
정책비전	수도권집중 완화 및 자립형 지방화	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거점 육성
추진목표	공공기관 이전 완료	가족동반 이주율 제고, 삶의 질 만족도 향상, 지역인재 채용 확대, 기업입주 활성화
정책대상	수도권 소재 공공기관	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, 지역주민, 지방대학생,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
추진과제	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수도권 중전부동산 매각	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,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,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,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, 추진체계 재정비
법적근거	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	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

-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2 월 초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『혁신도시 시즌 2』 업무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
- 금년 6 월까지 시 · 도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, 10 월까지는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
- 개편된 조직을 통해 『혁신도시 시즌 2』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

## 4. 與, 규제프리존법 반영 ' 규제혁신 5 법 ' 추진..." 野 설득 가능 "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보도자료	보도일자	2018.02.27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아시아경제

## 02

## 주요내용

## 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

-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혁신 5 법을 추진한다고 27 일 밝히고 당정이 규제완화 정책 방향에 본격 박차를 가할 전망
  - 문재인 정부는 정보통신산업, 금융, 지역특구에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발표
-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법안
  - 4 대 패키지법 : 정보통신융합법, 금융혁신지원특별법, 산업융합촉진법, 지역특구법 개정 등
  - 규제 전반에 대한 원칙규정을 담은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 등
  - 해당 법안들은 내일 중으로 발의될 것으로 보임
- 김태년 정책위의장
  -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5 개 법률 제·개정안을 발의할 것
  - 내일 의원총회 보고 후 즉시 발의할 것
  - 규제특례를 받아 제공되는 신기술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,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규제샌드박스 보완조치를 설명
  -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, 환경 등 공익적 가치 훼손, 대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논란이 존재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음
  - 규제혁신 5 법 중 지역특구법에 기존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특례 중 지역전략 산업용 특례 (60 개) 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대한 반영
- 규제혁신 5 법 내용
  - 관련 법령 존재 여부 및 법령상 허가 등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30 일 내에 회신
  - 규제 신속확인과 법령 공백 법령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출시 목적으로 우선 허가
  - 허가 기간 동안 관계기관은 관련법령을 정비토록 하는 임시 허가
  -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
- 다만 안전·환경 관리와 상충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규제완화 속도를 조절기로 했음
- 규제특례 제한 항목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,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특례는 제한하며,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특례를 가능하게 했음
- 다만 규제혁신 5 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합의 변수가 남아있음
-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을 고수
- 여당의 규제샌드박스는 지역 제한 없이 신기술·서비스에 대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특례를 신청하는 식이고, 야당의 규제프리존은 지역기반 (14 개, 수도권 제외) 로 지자체에 의해 사전 결정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정해진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
-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과의 합의와 관련
  -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문제는 충분히 토론이 가능할 것
  - 핵심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야당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봄

## 4. 與, 규제프리존법 반영 ' 규제혁신 5 법 ' 추진..." 野 설득 가능 "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보도자료	보도일자	2018.02.27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아시아경제

## 02

## 주요내용

## 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

-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혁신 5 법을 추진한다고 27 일 밝히고 당정이 규제완화 정책 방향에 본격 박차를 가할 전망
  - 문재인 정부는 정보통신산업, 금융, 지역특구에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발표
-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법안
  - 4 대 패키지법 : 정보통신융합법, 금융혁신지원특별법, 산업융합촉진법, 지역특구법 개정 등
  - 규제 전반에 대한 원칙규정을 담은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 등
  - 해당 법안들은 내일 중으로 발의될 것으로 보임
- 김태년 정책위의장
  -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5 개 법률 제·개정안을 발의할 것
  - 내일 의원총회 보고 후 즉시 발의할 것
  - 규제특례를 받아 제공되는 신기술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,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규제샌드박스 보완조치를 설명
  -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, 환경 등 공익적 가치 훼손, 대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논란이 존재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음
  - 규제혁신 5 법 중 지역특구법에 기존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특례 중 지역전략 산업용 특례 (60 개) 를 제외한 나머지를 최대한 반영
- 규제혁신 5 법 내용
  - 관련 법령 존재 여부 및 법령상 허가 등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30 일 내에 회신
  - 규제 신속확인과 법령 공백 법령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출시 목적으로 우선 허가
  - 허가 기간 동안 관계기관은 관련법령을 정비토록 하는 임시 허가
  -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
- 다만 안전·환경 관리와 상충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규제완화 속도를 조절기로 했음
- 규제특례 제한 항목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,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특례는 제한하며,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특례를 가능하게 했음
- 다만 규제혁신 5 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합의 변수가 남아있음
-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을 고수
- 여당의 규제샌드박스는 지역 제한 없이 신기술·서비스에 대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특례를 신청하는 식이고, 야당의 규제프리존은 지역기반 (14 개, 수도권 제외) 로 지자체에 의해 사전 결정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정해진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
-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과의 합의와 관련
  -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문제는 충분히 토론이 가능할 것
  - 핵심내용을 설명해드리면 야당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봄

## 1. 수도권 경쟁력 잡아먹는 거미줄 규제... 이번엔 완화될까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2.20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국민일보

## 02

## 주요내용

## ■ 이해관계 복잡하게 얽혀있어 찬성·반대 팽팽하게 대립

-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수도권규제에도 메스를 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
-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낡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여전히 심각한 수도권-지방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란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
- 이 와중에 정부는 수도권규제와 관련된 일관된 시그널을 주지 못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옴
- 19 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지방이전기업 투자유치제도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규제 완화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음
- 그러나 규제가 시행된 지 30 여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규제가 오히려 국가경쟁력 제고에 족쇄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
- 일각에서 수도권규제의 핵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
-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이익을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누는 편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
- 규제 형태를 현행 입지규제에서 성능규제로 바꾸자는 주장
  - 개발제한 등으로 생산시설을 아예 짓지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신·증축은 허용한 뒤 오염총량 등을 관리하자는 것
- 하지만 지방의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음
- 산업구조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반론
- 한국경제연구원
  - 2014 년 기준으로 수도권 공장용지 면적은 전국 공장용지 면적의 22.9%, 2008 년 24.3% 에서 떨어졌지만 낮은 수준은 아님
  - 공장등록건수 역시 2014 년 8 만 2648 건으로 전체 공장의 48.3% 가 수도권에 몰려 있음
- 2008 년 '10·30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' 등 이명박정부 시절 규제완화가 일부 실시된 만큼 더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옴
-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국정운영 5 개년 계획 발표 때 수도권규제 완화를 언급
- 논란이 심화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9 월 대정부질의에서 "수도권규제 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" 고 선을 긋고 나섬
-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김동연 부총리 지난달 언론 인터뷰
  - 신산업 분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면 수도권규제를 비롯해 패키지로 규제를 풀어줄 것
-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
- 정부 관계자 : 역대 정권마다 추진했던 수도권규제 완화는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제



## 2.2 차 공공기관 이전

## 01

## 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2.27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경기일보

## 02

## 주요내용

### ■ 26 일 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현재 ‘공공기관 지방이전’ 으로 효과 및 영향분석을 추진 중

- 앞서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위치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
  - 이에 지난 2011년부터 전국에서 153 개, 도내에서만 52 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
- 이런 가운데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영향력 분석과 함께 (가칭) ‘2 차 공공기관 지방이전’ 에 대한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음
- 이는 참여정부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지정된 공공기관 중 152 개가 수도권에 위치,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중 122 개 (경기도 28 개, 인천시 7 개) 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
- 부산광역시도 소위 ‘알짜’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예산 1 억 8 천만 원을 들여 이달 ‘부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’ 을 발주하는 등 이미 2 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맞이에 돌입
-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기도에 통보나 논의조차 하지 않아 결국, 도차원의 대책마련이 불가능한 상태
- 특히 공공기관 이전으로 해당 부지의 상권이 몰락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등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도가 2 차 이전에 대해 정부와의 사전논의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‘무방비’ 상태에 놓인 것
  - 실제 지방으로 기관이 이전한 뒤 남은 도내 국세공무원교육원 (수원), 한국예탁결제원 (고양), 대한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 (성남), 한국해양과학기술원 (안산)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(안양), 한국전력기술 (용인), 중앙 119 구조본부 (남양주) 등 7 곳의 부지는 아직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방치
- 더욱이 현재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문 정부의 ‘국토균형발전’ 대신 수도권규제 폐지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‘광역서울도’ 라는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음
- 그러나 이같은 남 지사의 발언과 관련, 지방에서는 가뜩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수도권이 하나로 뭉칠 경우 결국 국토균형발전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수도권규제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지는 상황
- 도 관계자
  - 지방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당위성을 언급하는 등 노력해야 하지만 반대입장인 경기도는 선불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
  - 2 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것
- 지역발전위원회 관계자
  - 현재 앞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이전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계획
  -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경기도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·도 간, 지역 간, 기관별 많은 사안을 고려해야 해 신중하게 추진할 예정

# 1. 공공기관 옮겼지만 기업은 수도권에 .. 균형발전 '절반의 성공'

## 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2.18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파이낸셜뉴스

## 02

주요내용

### ■ 인구, 일자리 수도권 집중 ..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,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만 지역 제조업 무너질수도

- 국토균형발전이 나온 핵심적인 이유
  - 우리나라의 국토와 자원은 한정되어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고르게 활용해야 함
  -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니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했고, 지방은 등한시
-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행된 국토균형발전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
  -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지방에서 만들어진 자본의 수도권 유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
  - 지방에 돈이 돌면서 지역경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남
- 하지만 여전히 생산규모 측면에서 수도권은 지방을 압도
-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생산기지나 신산업이 지방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현재로선 반쪽짜리 정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음

### ■ 국토균형발전, 절반만 성공

- 18 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의 지역소득역외유입 규모는 68 조 4000 억원
- 반대로 동남권과 대경권, 충청권, 호남권, 강원권은 지역소득이 역외로 유출
- 지방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만들어낸 소득이 수도권으로 지방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으로 흘러들어왔다는 의미
- 긍정적인 측면은 수도권의 지역소득역외유입 규모가 감소 중이라는 점
- 생산의 수도권 집중이 재상승한 지난 2012 년의 경우 수도권 지역소득역외유입 규모는 90 조 5000 억원이었지만 지난 2016 년에는 68 조 4000 억원으로 줄었음
- 반대로 지방의 경우 지역소득역외유출 현상은 유지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유출 규모가 감소
- 예컨대 지역내총생산 (GRDP) 규모가 전국 7 대 권역중에 두번째인 동남권은 지난 2012 년부터 2016 년 까지 지역소득역외유출 규모는 18 조 9000 억원에서 14 조 2000 억원으로 줄었음
- 이 같은 현상은 대경권과 호남권, 제주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
  - 수도권 . 동남권 . 대경권 . 충청권 . 호남권 . 강원권 . 제주권
- 과거 지방에서 형성된 대규모 자본이 수도권으로 흘러들었지만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킨 이후부터는 수도권으로 오던 자본이 줄고 그만큼 지방에 머물게 됐다는 해석이 가능

### ■ 아쉬운 '반쪽 효과'

-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의 지역총소득 (GRI) 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생산기반들은 수도권에 집중
  - 2012 년과 2016 년 동안 전국 평균 GRDP 성장률은 18.8%
  - 이 기간 수도권의 경우 22.1% 로 전국 평균을 상회
  - 수도권과 함께 평균을 상회한 권역은 충청권 (23.2%) 과 강원권 (23.2%), 제주권 (33.1%)
  - 강원도에는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에 의한 건설투자가 활발, 제주의 경우 관광 경기 활성화가 GRDP 를 상향
  - 따라서 사실상 지방 중에서 충청권이 유일하게 생산기반 확대된 지역
  - 반대로 동남권과 대경권, 호남권의 경우 전국 평균에 한참 밑도는 10% 대의 성장률을 보였음

## 1. 공공기관 옮겼지만 기업은 수도권에 .. 균형발전 '절반의 성공'

### 02

#### 주요내용

-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는 지방의 소득은 늘었지만 지방의 생산력 확대나 경제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여줬다는 분석
- 서정현 산업연구원 연구원
  - 참여정부 이후로 지방발전과 지역발전 정책 펴왔음에도 인구와 일자리, 취업자 시계열을 보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형식
  -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1 차적인 처방으로는 부족, 지방중소도시에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

#### ■ 정부 차원 지방지원 필요

- 수도권에 인구와 교육 및 문화 인프라가 집중되다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제조업 공장과 같은 생산시설을 수도권에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, 따라서 규제가 없다면 수도권 집중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임
- 차미숙 국토연구원 본부장
  -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봐도 교육이나 문화 등이 서울에 몰려 있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음
  - 집중되는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토균형발전 정책 등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
  - 다만 지방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
  - 더구나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만큼 새로운 정책도 제시돼야 한다는 것
- 이두희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연구실장
  - 수도권에 주로 기업의 본사나 첨단산업 등이 위치해 있음
  - 반면 지방에는 주력산업이 노후화된 지역이 많아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
  -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되면 그나마 버티고 있는 지방 제조업이 수도권으로 몰려갈 여지가 있음